미분양 넘치는 제주… 대책 역부족

도, TF 구성 대책 마련 총력… 관련법 개정 등 건의
미분양 매입 공공임대 활성화·대응 매뉴얼 구축도
천정부지 분양가·악성 미분양에 대책 효과 미지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과 주택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기관 등 17명으로 TF를 구성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년 전 매입 단가와 시중 가격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미분양주택이 아닌 130호를 매입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인 가운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 4월 말 기준으로 774호(제주시 420호, 서귀포시 354호)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736호에 비해 38호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9월 711호를 시작으로 10월 731호 등 8개월 연속 700호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 진입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5월 현재 1126호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분양주택은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매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해소난 등의 영향으로 제주 건설업은 2015~20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6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퍼포먼스에 동참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중소기업 위한 데이터센터 만들 것"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박영선 장관, 강연서 밝혀
중기업계, 경제 활성화 다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초연결 시대와 공동의 미래'를 주제로 26일 롯데호텔제주에서 개막했다. 2007년 매해 열리고 있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중소기업 지도자들이 초연결시대를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개막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연구진과 중소기업의 숙련된 전문가들, 스마트공장에서 생긴 유휴 인력이 데이터 분석에 투입되면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위해 중기부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회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4·끝) 기고문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됐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제1야당은 빠진 모양새여서 제대로 국정 현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다수 국회 계류
행안위 계류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
발의 후 국회서 논의 안된 법안 '수두룩'

국회 내부 정쟁에 피로감 커지는 국민…
총선 의식한다면 산적 현안 처리해야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됐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보니, 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당장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작년 10월 26일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내용과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은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가늠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됐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소관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했다.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 정쟁 중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고,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체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 국회의 표는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윤 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스마트 농업·우도 폐기물 소각시설 등 제주시, 내년 국비 4494억 확보 박차

제주시는 지난달 2020년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됨에 따라 신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2020년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내년도 국비 신청액 규모를 4494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국비 지원 주요사업을 보면 스마트 농업, 해양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이다.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도면 폐기물 소각 시설비, 폐기물 재활용 센터 구축비 등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을 참고해 내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이를 중앙부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도 소관 부서와 적극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 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농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1리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밑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비 : 희토락F + 복비
○ 비대 : 희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 · 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를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페르카®
완효적 질소비 효과
석회효과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선충 밀도의 저하
잡초의 경감
토양소독 효과
가축의 기생충 방제
유기물의 부숙 촉진
토양의 비옥화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